

01

여성인권과 문화적 차이의 문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보명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

들어가며

2018년 여름,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난민법과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70만개가 넘는 서명을 모으면서 종료되었다. 같은 시기 인터넷 공간과 광화문 거리에는 난민의 체류가 한국사회에 초래할 위험과 혼란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떠돌았다. 그동안 유럽이나 서구 국가들의 문제로 간주되던 글로벌 난민 위기(global refugee crisis)는 빠른 속도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였다.¹⁾

제주도 예멘 난민의 ‘등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예멘 난민들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또 어떤 경로로 제주도에 도착했는지, 전쟁을

피해 예멘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진짜’ 난민인지 혹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가짜’ 난민인지, 왜 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이 성인 남성으로 구성되었는지, 이들이 ‘진짜’ 난민이라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이 이들의 체류와 정착을 허락해야 할 법적, 정치적, 윤리적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한국사회가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이 그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난민에 대한 질문들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사회와 그 시민들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에서 나타난 이슬람 포비아와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확산시킨 혐오 뉴스의 역할은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놓인 좌표를 뚜렷하

1) UNHCR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전 지구적으로 난민의 숫자는 2천 5백만 명을 넘는다. 이는 내전 등으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국경 내부의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으로 분류되는 약 4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과 3백만 명 가량의 망명 신청자를 제외한 숫자다.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유례없는 규모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독일과 스웨덴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난민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이 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부족함과 정책의 공백 속에서 ‘난민 위기’는 난민들이 경험하는 위기가 아닌 난민들이 초래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재현된다.

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국민이 먼저’, ‘협오가 아닌 안전할 권리’, ‘국민 동의 없는 난민법 반대’와 같은 구호들은 촛불과 더불어 성장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강화하는 힘으로 표출되는 지점을 드러냈다. 또한 뚜렷한 근거나 정당성 없이 생산되고 배포되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루머와 혐오 뉴스 기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난민들에 대한 공포는 비판적 성찰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중주의(popularism)의 부상과 그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난민위기의 규모를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 결혼 여성들, 그리고 탈북민의 숫자에 대비할 때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는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은, 가짜뉴스와 혐오담론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그려졌다.

난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성인권 및 페미니즘과 만나고 겹치고 충돌하는 구도로 제기되면서 여성인권과 문화적-인종적-종교적 차이들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여성들이 많이 방문하고 사용하는 지역 맘 카페나 포탈의 ‘여초’ 커뮤니티에는 조혼과 여성할례에 대한 글들이 등장하였으며 난민과 이주민들을 집단 강간의 가해자로 지목 혹은 암시하는 혐오 뉴스들이 공유되었다. 원치 않는 결혼, 성관계, 성기 절제 등을 강요당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공포, 혐오,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한국 여성들과 시민들이 예멘(남성) 난민들의 한국 체류를 거부할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예멘 난민들은 성적인 동시에 문화적-인종적-종교적 위험을 내포하는 집단으로 재현되었다. 이슬람

포비아는 페미니즘과 조화롭게 맞물렸으며 난민인권과 여성인권은 공존 불가능한 대립의 관계로 재현되고 배치되었다.

페미니즘과 문화적 차이들의 문제

여성인권과 문화적 차이 간의 긴장은 페미니즘의 역사의 오래된 흐름이다. 비서구 문화의 전통이 조장하는 가부장적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위험하고 야만적인’ 범죄자로서의 무슬림 남성이라는 구도는 19세기 식민주의 시대로부터 1990년대의 국제여성인권운동, 그리고 보다 최근의 반-테러리즘과 반-이민 담론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으며 각각의 시대적 사례들은 젠더와 인종-민족-문화 정치학이 상호교차적으로 작동하고 구성되면서 서구의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국면들을 만들어왔다(Mani, 1987; Spivak, 1988; Stoler, 1995; Abu-Lughod, 2013; Keskinen, 2018). 여성인권과 다문화주의, 페미니즘과 문화적 차이, 젠더 정치학과 인종 정치학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상호관계는 이러한 역사적 지형과 궤적 속에서 변주되고 재구성되었다.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의 갈등은 수잔 몰러 오킨(Susan Moller Okin)이 쓴 논쟁적 문제제기가 담긴 에세이 “다문화주의는 여성에게 나쁜가?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를 통해 학술적 논쟁으로 등장했다. 오킨(1999)은 다문화주의가 첫째, 소수 문화 공동체가 그 자체로 이미 젠더화된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가족을 비롯한 사적 영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12). 많은

문화 공동체는 여성은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활동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적 과정에 깊이 영향 받는다. 이는 특히 많은 문화적 실천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하여 조직된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13). 젠더 중립적인 문화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규범은 근본적으로 젠더화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대부분의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통제와 폭력의 기제로 작동하는 한, 문화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이를 누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여성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충돌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킨(1999)은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문화적 차이 자체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보다 특정 문화 내에 여성이 놓여진 ‘위치’를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주장한다(22).²⁾

다문화주의에 대한 오킨의 비판은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의 이름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문화적 실천이나 규범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으며, 주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의 맹점 혹은 위험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법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변호(cultural defense)의 사례들에 대한 사라 송(Sarah Song)의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송(Song) (2005)이 보여주듯 다문화주의는 소수문화 공동체

내부의 권력관계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혹은 무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비백인 이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이중적 억압, 즉 젠더 억압과 인종적 억압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혼의 관계를 맺은 아내를 구타하고 살해한 중국인 이주민 남성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던 1988년의 뉴욕 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인류학자는 서구사회의 젠더 규범과는 다른 중국의 유교적 관습과 가부장적 문화를 부각함으로써 아내를 구타하고 살해한 중국인 이주민 남성의 행위를 문화적으로 변호하였다. 이 사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소수 민족 공동체 내부의 권력관계에 대해 무지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중국의 문화와 젠더 규범은 한 가지로 정의 및 재현 가능한 무엇이 되었으며 동시에 그 정의와 재현은 남성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달리 말해 제도적 실천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또한 공동체 속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가 그 구체적 구현과정에서 갖는 복잡한 맥락과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문화를 하나의 문화적 각본(cultural script)로 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송(Song)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통’은 현재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비-백인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관계는 종종 페미니즘의 서구 중심성과 다문화주의의 남성 중심성

2) 오킨의 논의는 서구문화와 비서구문화 간의 위계적이고 발전론적 관계를 전제하는 듯 보인다. 그녀는 세계의 많은 문화들이 과거에 가부장적이었으며, 몇몇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제시한다(16).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적 폭력과 대상화에 시달리지만 법적으로는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한 더 이상 결혼과 재생산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취급되지도 않기 때문이다(17). 자유주의적 권리의 확보는 여성의 해방 및 진보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된다. 비서구 문화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오킨이 이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있어 “어쩌면, 그들이 태어난 문화가 소멸되어 이들이 보다 덜 성차별적인 문화로 통합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을 수 있으며, 혹은 “자신의 문화를 다수 문화적 가치의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젠더 평등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데 이르게 한다(23).

사이에서 왜곡되거나 삭제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페미니즘의 인종적 편향과 다문화주의의 젠더 편향이 만들어내는 이 공백은 킴벌리 크렌쇼(Kimberle Crenshaw)와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 등이 제안하는 교차성의 정치학(intersectional politics)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레티 볼프(Leti Volpp) (2001)는 젠더 폭력을 바라보는 서구문화 중심적 서사를 지적한다. 서구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폭력은 개인의 일탈로 간주되지만 비서구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성적폭력은 제3세계 문화의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가부장성을 반영하는 증거로 제시되고는 한다(1187). 또한 이러한 이분법에서 비서구여성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닌 문화적 관습을 따르는 종속적 주체로 규정되기도 한다. 서구 미디어나 법적 언어는, 가부장적 폭력에 불구하고 이혼을 감행하지 못하는 비서구 여성들을, 합리성과 이해성이 부족한, 그리하여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전근대적 주체로 묘사한다(1191). 달리 말해 ‘문화’는 비서구 여성들의 다름(difference) 혹은 비-보편성(partiality)을 드러내는 특권적 표지로 작동하며, 비서구 문화에 대한 서구의 개입은 정확히 비서구 여성들을 가부장제의 폭력으로부터 구제하는 계몽적이고 인도주의적(humanitarian) 실천으로서의 도덕적 위상을 갖게 된다. 비서구여성은 그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전근대적 ‘전통’ 혹은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개인’ 및 ‘권리’가 지배하는 근대적 세계로 진보할 것을 요구 받는다 (1198). 여기에서 자유주의적 권리의 주체(a right-bearing liberal subject)는 그 자신의 문화적 구체성과 역사적 조건성을 삭제하고 보편성의 지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비서구 여성들이 목적론적으

로 도달해야 할 미래적 지평이 된다. 인종 정치학과 젠더 정치학 간의 이분법적 분리는 비서구 여성들에게 있어 ‘문화’가 억압의 기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삶의 양식과 저항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자원과 배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1202). 나아가, 이러한 이분법적 분리는 비서구여성의 젠더적 경험과 정체성 및 이해관계가 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지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즉 어떤 젠더 정치학도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구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무슬림 페미니즘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탐색은 서구 자유주의 정치학의 계보에서 이탈하는 페미니스트 주체성과 행위성을 이론화한다. 예를 들어 사바 마흐무드(Saba Mahmood)(2011)의 저서 <경건의 정치학(Politics of Piety)>은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이슬람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던 이집트 여성들에 대한 인류학적 관찰연구를 통해 서구 자유주의 전통, 즉 규범과 제도에 대한 ‘저항’에 토대를 두는 페미니스트 행위성과 세속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마흐무드는 서구 자유주의 철학 및 주류 페미니즘에서 전제하는 ‘자유’와 ‘행위성(agency)’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근대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적 실천을 통해 저항적 행위성을 구성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삶을 순응(docility)과 억압으로 단순화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비록 이슬람 모스크에 다니며 코란을 공부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현대 이집트의 도시 지역 거주 여성들은 종교적 규범에 일방적으로 순응하거나 그것에 종속된 피해자로 정의될 수 없다. 이 여성들은 이미 ‘근대적’인 주체들로 자신의 종교적 규범을 선택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내면

화하고 따른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기 때문이다. 지배적 규범을 거부하거나 규범에 저항하는 행위가 아닌 규범과의 긍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무슬림 여성들의 행위성과 역량은 서구 근대의 세속적 주체가 위치되는 자유와 억압 간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구도로는 포착되기 어렵다.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적 실천에 대한 마흐무드의 연구는 서구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규범적 도달점으로 설정해온 자기완결적인 개인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주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킨, 송, 볼프, 마흐무드 등의 연구는 우리가 ‘문화’로 명명하는 규범 및 실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젠더 정치학과 인종 정치학이 서로 만나고 교차하고 충돌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면모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화는 젠더 중립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젠더 또한 문화 중립적일 수 없기에 여성인권운동은 다문화주의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문화는 고정된 총체가 아닌 변화하는 실천의 장으로 재정의되며 페미니즘은 특정한 문화 공동체의 규범과 구조에 개입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여성인권은 고정되고 완결된, 혹은 탈문화적으로 제시되는 목표가 아닌, 문화적으로 특정하며, 현재적 맥락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여성인권과 페미니스트 행위성은 그 내용이 아닌 지향과 방식의 측면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여성인권과 젠더정의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간의 갈등은 또한 비서구

여성들의 인권을 정의하고 구현함에 있어서 ‘문화’가 특권적인 표지로 포착되고 구성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할례(female circumcision), 조혼(child marriage), 일부다처제(polygyny), 과부 화장(widow immolation) 등과 같은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권력 구조로서의 젠더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화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그 문화를 실천하는 특정한 인종 및 종교 공동체의 의식과 규범을 개선하는 교육적 개입이 실천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를 삶의 양식이 아닌 문명과 교양으로 정의하는 서구 식민주의의 관점을 은연중에 반복하면서 서구 근대성을 비서구 주체들의 미래적 도달점으로 설정하는 한편(Williams, 1985), 서구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상대적으로 비가시화하는 문제적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여성할례는 야만과 폭력으로 정의되지만 성형수술은 안전하고 자율적인 선택으로 묘사되며, 일부다처제는 후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로 비판받지만 일부일처제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망각되며, 부르카는 억압의 상징이 되지만 비키니는 해방과 자유의 기표가 된다. 가부장제는 비서구사회의 문제가 되며 서구사회는 페미니즘의 목표가 성취된 포스트 페미니즘의 세계로 묘사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예를 들어 여성의 성기에 대한 교정적 시술이 서구의 첨단 의료에서도 실천된다는 사실이나 십대 소녀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서구 문화에서 더욱 일상적이고 정상화되었다는 점, 일부일처제나 친밀한 관계 또한 가정폭력과 아내학대의 온상이라는 현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이 부르카보다 더 억압적이거나 위험한 문화적 실천일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은 강조되지 않는다. 서구 여성들은 문화의 행위자들로 정의되지만 비서구

여성들은 문화의 희생자들이 된다.

여성할례, 조혼, 과부화장, 일부다처제, 부르카 등의 문화적 실천을 여성인권의 가시적이고 특권적인 지표로 삼는 접근은 이러한 문화적 실천이 일어나는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과 조건들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문화적 관습을 그것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세계로부터 독립된 무엇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할례의 감소나 폐지는 그것이 실제로 해당 사회나 공동체의 젠더 관계 및 구조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마치 그 자체로 여성인권의 지표로 인용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여성할례와 여성인권 혹은 젠더 평등의 관계가 오인된다. 즉 여성할례는 젠더 불평등의 반영이자 산물이며 따라서 그것의 근절 혹은 변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반대로 여성할례의 감소나 폐지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여성인권과 젠더정의를 고양할 것으로 상상되거나 서술된다. 이러한 전도된 인과관계 속에서

서구 여성인권운동의 관심과 자원은 종종 여성할례 등을 비롯한 문화적 관습을 근절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에 집중되는 반면, 수도나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나 토지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페미니즘의 의제가 아니거나 이차적인 문제인 듯 취급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가부장적 폭력에 저항하여 문화적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먼저, 혹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은 문화적 차이들을 배제하거나 초월하는 의제가 아니다. 반대로 여성인권은 문화적 다양성과의 비판적 관계 속에서 접근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젠더 정의(gender justice)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들은 문화의 희생자인 동시에 문화적 행위자이며, 문화적 실천은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정이다. 서구와 비서구사회 모두에서 여성인권은 문화적 자율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젠더 정의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Abu-Lughod, Lila. 2013. *Do Muslim Women Need Saving?* Boston: Harvard UP.
- Mani, Lata. 1987. "Contentious Traditions", *Cultural Critique* 7, pp.119-156.
- McKinnon, Sara. 2016. *Gendered Asylu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kin, Susan Moller.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Susan Moller Okin et al. eds.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Princeton UP.
- Song, Sarah. 2005. "Majority Norms, Multiculturalism, and Gender Equal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4, pp.473-489.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 Stoler, Laura Ann. 1995. *Race and the Education of Desire*. Durham: Duke UP.
- Volpp, Leti. 2001. "Feminism versus Multiculturalism", *Columbia Law Review* 101, pp.1181-1218.
- Williams, Raymond. 1985. *Keywords*. Oxford University Press.